

서해안권 지역자원 연계 계획 수립

전북도, 문화·관광 인지도 저조로 거점화 어려운 상황 등 개선코자

전북 서해안 지역(군산, 김제, 부안, 고창)의 문화·관광자원의 인지도 저조, 일관된 컨셉·전략의 부재로 부가가치 창출에 제한이 있고 거점화가 어려운 상황 등을 개선하고자 '전북 해안권 연계협력 지역계획'을 수립한다.

전북도는 이번 용역을 위해 국토교

통부와 업무협약을 지난해 12월 체결하고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해 13일 전북도청에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참석자는 국토교통부 해안개발전지 원과장(국토연구원, 전북연구원), 시군 기획팀장이 참석해 과업 방향, 추진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보고사항은 시군별 대표자원

현황, 자원별 만족도 평가, 관광객의 여행실태 분석 등 현황 보고와 전라북도 비전·목표를 제시했다.

전북도 해안권의 비전은 '환황해 Gold Coast'로 설정했으며 목표를 '전북의 새로운 관광거점 조성', '연계 협력을 통한 미래 콘텐츠 생산'이다. 본 용역을 통해 전북도와 국토교통

부는 전북도 해안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 및 연계협력 증점사업을 발굴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천환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2023년 세계 팜비리대회 유치로 전라북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 기대감 있는 이때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하여 해안권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남대 폐교 결정 후유증 해소되나?

남원지역 경제활성화 전북도, 특교세 10억 확보

전북도는 지난 2월 28일 서남대 폐교 결정으로 침체된 남원지역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난 달 21일 송하진 도지사가 김부겸 행안부장관을 직접 만나 서남대 폐교로 인해 침체된 남원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긴급 지원을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전라북도 동부권 최초의 일 반산업단지인 '사매일반산업단지'를 조기에 완공함으로써 입주예정기업의 조기정착을 통해 5,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 건립 15억 원, 고창~내장(지방도 확포장 10억 원, 군산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25억 원, 2018 전국체전경기장 진출입로확포장 10억 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10억 원, 내진보강 등 사업에 10억 원 등 추가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 및 도민안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북도민안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과 협조하여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봄맞이 야수터·공원 음수대 먹는물 공동시설물 수질점검

전주시가 야수터와 공원 음수대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먹는물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봄을 맞아 동서하동 좁은목 야수터 등 지정야수터 2곳과 공원 음수대 12곳 등 먹는물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수질오염 등 건강 위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맑은물사업본부와 완산·덕진구청, 관할 동 주민센터와 합동점검반을 편성, 이달 중순부터 집중점검에 나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취수원 주변 오염원 제거 △외산 살균시설 필터 교체 등 현장 시설물 점검 등이다.

또한 일반세균 등 4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함께 실시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안내판을 통해 알려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관계자는 "여의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다수의 이용객들이 야수터와 음수대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시설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야수터와 공원 음수대 주변 위생상태도 점검, 수질검사도 실시해 시민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서훈 국정원장(왼쪽)이 13일 도쿄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 방북·방미 성과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日 아베, 남북·북미정상회담 성공 협력 약속”

서훈 국정원장, 방북·방미 성과 관련 면담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는 13일 일본 도쿄 아카사카에 위치한 총리관저에서 만나 대북특사단의 방북, 방미 결과와 함께 남북 일본인 피해문제를 포함한 북일관계에 대한 대화를 약 1시간 가량 나눴다.

우리 측은 서 원장과 함께 방일한 남관청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가 자리했다. 일본 측에서는 고노 외무상, 가나스기 겐지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 등이 배석했다.

아베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일본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 물어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핵미사일, 납치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일본의 기본적인 방침"이

라며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과의) 대화에 일본도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을 해 말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연계하고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핵미사일, 납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 원장은 "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는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한일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전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이어 "한반도의 비핵화,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두 정상간의 의지,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런 흐름이 시작된 것은 아베 총리가 평창 올림픽에 참석하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참석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다"고 했다.

서 원장은 면담이 끝난후 기자들에게 "아베 총리와 아주 유익하고 훌륭한 면담을 했다"며 소감을 말했다. 서 원장은 이어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내용을 아주 상세히 설명했다"며 "아베 총리는 최근 이뤄진 남북관계 진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변화의 의지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서 원장은 또 아베 총리가 "앞으로의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져 있을 미북 정상회담이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협력, 협조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4년 연임제’ 개헌 자문안 포함 | 헌법전문특위, 문 대통령에 보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개헌 자문안에 포함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자문특위로부터 권력구조 개편, 국무총리 선출방식, 수도(首都)조항, 토지공개념 등이 담긴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았다.

자문특위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이같이 설명했다.

먼저 김종철 부위원장은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임기와 관련된 부분은 자문위 내에서 수렴돼 4년 연임제로 (자문안에) 보고됐다"며 "4년 연임제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대의기관들과 국민 간의 권한배분을 어떻게 하고 합리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안들이 복수로 제안돼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다만 임기와 관련된 의미로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해구 위원장은 "수도조항은 헌법 총강에 들어간다"며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해구(가운데) 위원장, 하승수(오른쪽) 부위원장, 김종철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두 번까지 수행할 수 있는 안으로, 연이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안,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하는 총리선출권 등이 복수안으로 보고됐다.

아울러 자문특위는 수도 조항도 개헌 자문안에 포함시켜 보고했다. 정해구 위원장은 "수도조항은 헌법 총강에 들어간다"며 "대통령이

오는 20일을 전후해 발의할 것 같다. 그래서 자문안에 대해 구체적 내용도 그전에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예외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만 말씀드릴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대통령안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뉴시스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제한

전북도선관위, 15일부터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월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에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5일까지,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또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하는 경우에는 그만 두지 않아도 된다.

▲선거사무관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 참관인이 되려면 3월 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구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내년 향토산업육성 신청 공모

도, 내달 20일까지 접수

전북도는 농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1.2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진진을 위해 2019년 향토산업육성사업 대상자를 4월 20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 시행 전 사업공모(전년도), 심사, 선정, 컨설팅,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계획을 내실화 및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간 융복합화가 가능한 시·군단위 향토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시·군 또는 농업인 조직 및 생산자단체, 향토기업 등이 구성한 법인(사업단)에 4년간 30억원(도지특 50%)

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회담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시군의 담당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전북도에서는 사업타당성, 사업추진 역량, 사업추진여건, 추진체계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관련 전문가를 통해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 계획서가 우수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 2, 3차 산업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경찰, MB정부때 고교생 여론조사 동원 계획

내부문서 조사 결과

이명박(MB) 정부 시절 경찰이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고등학생들까지 댓글조작에 동원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입수한 경찰 내부 문서에 따르면, 2011년 당시 경찰청이 보안요원 뿐만 아니라 총 23개 보수단체 회원 7만여명을 여론 조작에 동원할 계획을 수립하면서 '한국 고등학생 포럼'이라는 단체도 포함시켰다.

경찰청 보안2과에서 2011년 4월 18일 특별취급 인가를 받고 만든 '안보관련 인터넷상 왜곡정보 대응 방안' 문건에는 국가안보 관련 인터넷 이슈 발생시 악의적·편파적인 정보전달로 인한 사실 왜곡 대응 일환으로 사안에 따라 1~3단계별 대응 방안이 적시됐다.

1단계는 네티즌 관심이 미미한 사안으로 보안사이버수사팀 8명만을 동원해 대응토록 했고, 2단계는 왜곡여론이 확산될 경우 보안사이버

수사대를 포함해 전 지방청·경찰서 보안요원 전원(1860명) 투입해 대응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왜곡 여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3단계에는 보수단체 '동원팀'이 떨어진다. 보안요원 전원은 물론 네이버,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보수단체 회원 7만 791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 보안국이 여론에 퍼뜨릴 내용을 정리하고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투표 참여 등을 독려해 여론을 조작하는 방식이다.

보수단체 중에는 '한국고등학생포럼'이 포함됐다. 2010년 9월 설립된 이 단체는 당시 회원수가 236명으로 문건에 적시됐다.

한국 고등학생 포럼은 보수 지지·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대학생포럼의 멘티 단체다. 경찰청은 이 같은 계획의 실행방안을 구체화 한 '보안사이버 인터넷 대응조치계획'이란 문건을 같은 해 8월 18일 작성, 배포했다.

/뉴시스